

네트워크회의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도시 불평등과 인권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초록]

이 글은 빈곤과 불평등에서 기인한 인권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불평등의 구조화에 따라 청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인구집단이 겪고 있는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도시의 정책 추진 경험과 지역의 전략 개발, 행정적·정치적 구제와 보장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도시는 ‘인권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인권기본계획을 짜며 주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노동·환경·청년·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지원과 저출생·고령화·1인가구 증가 추세속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 등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도가 취약계층의 인권증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세상은 불평등하고, 더욱 불평등해질 수도 있다.

세상은 불평등하다. 신분제 사회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했고, 신분제가 해체된 이후에도 인종과 피부색, 출신 국가, 가문 혹은 가족 배경에 의한 불평등은 생활양식으로 굳어진 경우가 많다.

불평등(不平等)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차별이 있어 고르지 못함”이다. 영문으로 inequality, unequal, injustice, discrimination, odds 등으로 표기되며, “부(富)의 분배의 불평등(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wealth)” 등과 같은 방식으로 쓰인다.

불평등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사회와 사회 간에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일어난다. 일반적인 불평등은 주로 법 앞에서의 불평등을 의미하며 경제적 불평등은 심각한 빈부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가리킨다. 평등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 집단과 집단 사이에 차별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법 앞에서의 평등, 남녀의 평등, 국가 사이의 평등, 인종·종족 간의 평등 등을 의미한다. 평등은 자유의 관념과 함께 근대 민주주의 사상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관념의 하나이다.

한 사회의 불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지니계수’이다. 이는 가장 평등한 상태를 0, 가장 불평등한 상태를 1로 보기에,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니계수-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v050ma732a5>)

지니계수는 세전 지니계수와 세후 지니계수를 통해 조세 등을 통해 소득불평등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하기도 한다. 즉, 세금을 떼기 전 시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와 조세, 복

지,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이후 가처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를 비교해 개선율을 산출한다.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을 더하고 조세를 제한 것이다. 개선율이 높으면 그만큼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게 작동했다는 뜻이다.

한국은 ‘지니계수’ 개선율 순위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2016년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률은 11.7%로 통계가 발표된 27개국 중 26위이었다. 한국의 2016년 세전·세후 지니계수는 각각 0.402, 0.355이었다. 지니계수 개선율은 2006년 7.3%에서 2009년 9.0%, 2015년 11.1%, 2016년 11.7%, 2017년 12.6%로 올랐다. 2017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EITC)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61002100351029001&ref=daum)

한국의 지니계수는 소득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0.3대로 상승하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안 0.2대 중후반을 유지하다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고점으로 서서히 줄어 0.2대 중반을 회복했으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 다시 0.3을 넘었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줄고 있으며, 이는 공적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202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득 지니계수는 0.333으로 심각하게 불평등한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까지 0.25~0.28이었던 시대보다는 확실히 늘어났고, 일부 시민들은 통계청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기도 한다. 과거보다 불평등을 경험한 시민들은 분배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사고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namu.wiki/w/%EC%A7%80%EB%8B%88%20%EA%B3%84%EC%88%98>)

이는 현대사회에서 남녀차별을 조장하는 가부장제 문화가 많이 퇴색되었지만, 현대인은 조선시대 사람보다 성차별에 더 민감할 수 있는 것과 같다.

2. 불평등은 삶의 격차를 키울 수 있다.

불평등은 시민의 삶의 격차를 키울 수 있다. 불평등을 영어로 표기하면 inequality이고 discrimination이기에 불평등과 차별은 동의어일 수도 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계급·계층별, 인종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준거에 따라 불평등하다. 그 근거에는 소득의 불평등, 자산의 불평등이 있고, 가정환경, 교육배경, 건강, 주거,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불평등이 공존한다.

불평등은 가족을 통해 전승된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다. 인간은 어린 시절 가정 환경에 의해 교육기회와 학습능력이 좌우되고, 학교교육을 통해 직업이 분리되며, 괜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소득을 획득하고, 결혼시장에서 우대받는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자녀의 삶이 어느 정도 결정되고, 자녀의 노력에 의해 불평등은 더욱 공고화되기도 한다.

한국사회는 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경제개발을 통해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가 압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산업이 밀집하면서 수도권의 지가가 상승하면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더 갖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렵게 살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를 불안정 사회로 바꾸었다. 갑작스런 경제 위기로 실업과 파산이 늘고 이혼이 증가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한 대로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면서 비정규직이 늘어 고용이 불안정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을 세계 시장의 위험에 노출시켰다. 글로벌 금융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추구하는 힘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출산율은 급감하고,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소인가구 혹은 1인가구는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한국사회가 농촌·농업·농민이 중심인 사회에서 도시·상공업·임금노동자가 중심인 사회로 바뀌면서 직계가족은 핵가족으로 바뀌었다. 핵가족은 일차적으로 영유아보육을 사회문제화 시켰고, 정부와 사회는 어린이집 등을 증설하여 대응했다. 이후 노인은 자녀가 성인이 되거나 결혼하면 부부끼리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자 사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중년도 이혼후 혼자 사는 경우가 늘었고, 혼인하지 않은 대학생과 청년도 원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늘었다. 만혼과 비혼,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문화는 소인가구와 1인가구를 더욱 보편화시켰다.

2022년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일·가정양립과 외국인 현황 중심으로 조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39.9%(0.52명) 감소한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21년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이다.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혼인율이 낮아지고, 혼인후 낳은 자녀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2022년 혼인건수는 19만2000건이며,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뜻하는 조(粗)혼인율은 3.7건이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1.6세, 여자는 1.9세 상승했다. 2020년 25~49세 인구 중 혼인 경험의 비율을 보면 남자는 52.9%, 여자는 67.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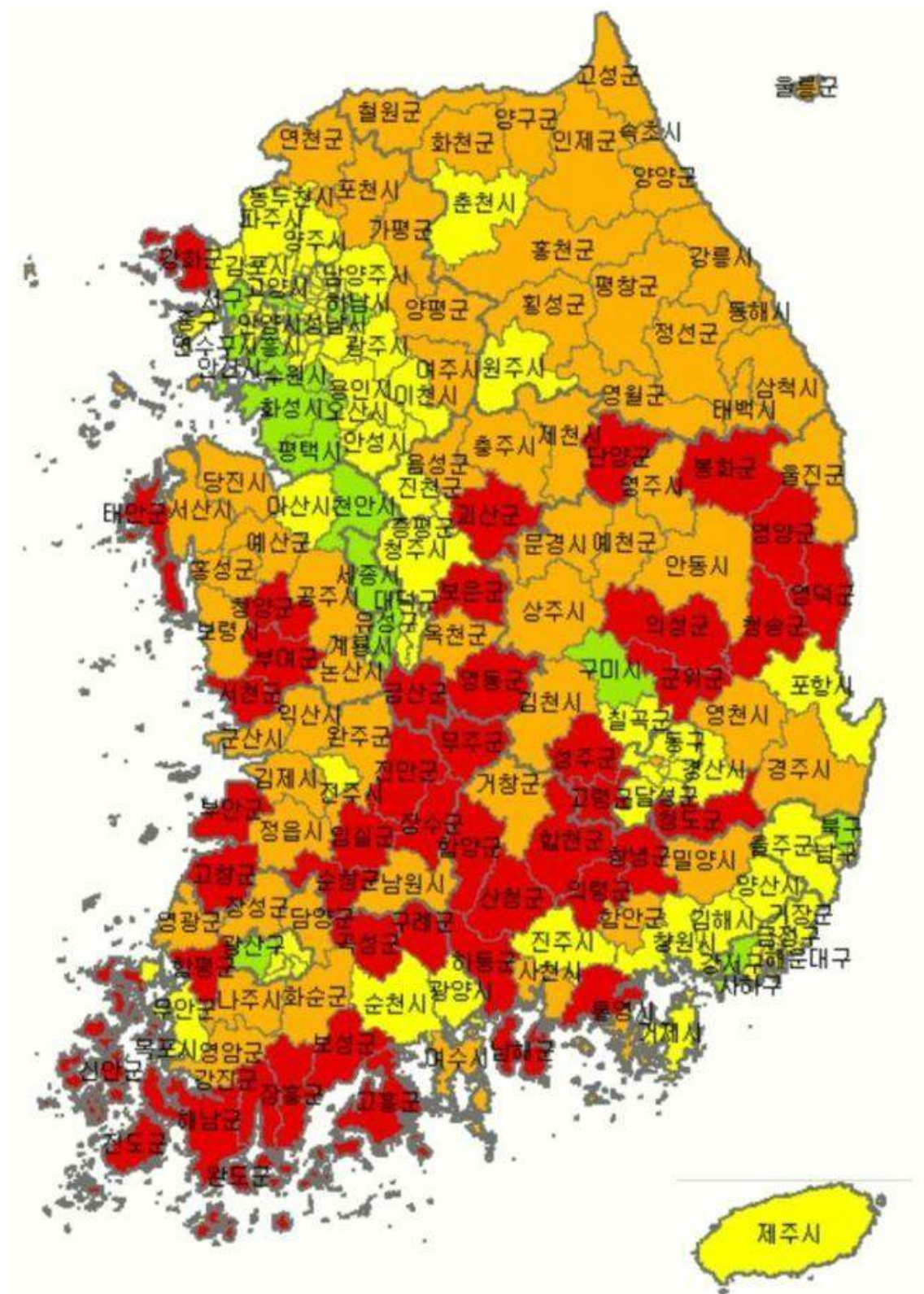
소인가구 혹은 1인가구는 위기시에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을 크게 훼손시켰다. 우리 사회는 어린이집으로 영유아의 돌봄을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장애인, 노인, 환자의 돌봄은 오랫동안 가족과 시장에 방임하였다. 고령화와 함께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후기 노인의 돌봄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어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지만, 요양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노인의 보호는 매우 취약하다.

한국사회에서 불평등의 심화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소득의 원천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인데, 코로나19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줄고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었다. 특히 재산소득은 “돈이 돈을

버는 것”인데, 고소득층이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등으로 돈을 벌 때, 저소득층은 임차료, 이자 등을 지불하느라 가처분 소득이 크게 줄었다.

코로나19는 재택근무를 늘리고 보편화시켰는데, 일과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대도시의 좋은 주택은 그 가치가 높아졌다. 더 좋은 교육환경과 일자리를 갖춘 대도시의 주거 가치는 더욱 높아졌고,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자산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데, 소멸이 예상되는 지역은 투자도 위축되기에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6년에 처음 사용한 소멸위험지수는 만 20~39세 여성 인구수를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구가 줄면 학교, 병원, 시장과 같은 생활필수시설조차 접근하기 어렵게 된다. 지도에서 빨강색 지역이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곳인데, 전남·전북·경북 등 산악지역과 전남·경남·충남 등 해안지역이 인구 소멸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72617561240261?utm_source=datum&utm_medium=search

3. 국가는 조세와 복지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1) 국가는 국민의 가구 소득을 늘릴 수 있다.

국가는 조세와 복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국가는 모든 일하는 시민이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용자의 부담능력과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1년에 4,320원에서 2015년 5,580원, 2020년 8,590원, 2024년 9,860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2018년에 전년도보다 16.4%를 인상하여 7,530원으로 한 적은 있었지만, 임기내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http://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비자발적인 실업으로 일하지 않을 때 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인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구직급여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자는 최저 수급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났고, 지급액이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었다. 이렇게 하여 구직급여 총액은 늘었지만, 1인당 구직급여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가 1일 상한액 66,000원을 넘기면 상한액만 받을 수 있기에 평균임금이 330만 원 이상인 사람은 60% 미만으로 줄어든다. 매년 임금과 물가가 인상되었지만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인상되지 않아서 구직급여액의 실질 가치는 감소되고 있다.

정부는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표준보육료 지원사업 등을 통해 가구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여주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는 기초연금을 받고, 기초연금액이 매년 조금씩 인상되기에 사회수당도 수급자의 소득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 가장 가난한 국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현금으로 받고 의료급여를 현물로 받을 수 있다. 실업이나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출산모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데, 수급자는 자녀 출산후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일 기준 1년 동안 2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국민에게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여 가구 소득을 늘려주고, 각종 할인 혜택 등을 통해 가계의 지출을 낮추어 줄 수 있다.

2) 건강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보건의료정책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고, 국민은 건강보험 등을 통해 의료비를 낮출 수도 있다.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2013년에 98.5%로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비슷하다. 서울 등 7개 특·광역시 상수도 보급률이 99.9%, 기타 시 지역이 99.3%이지만 농어촌 지역은 89.8%로 조금 낮다. 전국 최하위권인 전남도 2021년 기준 상수도 보급률은 92.6%이고, 하수도 보급률은

82.8%이었다. 높은 상하수도 보급률은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여 시민 건강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뜻이다.

또한, 전국민이 건강보험의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국민이 건강보장을 받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요양취급기관을 이용하지만, 암 등 4대 중증질환은 입원비의 본인부담비율이 5%이고, 희귀난치병은 10%로 낮아져서 의료 접근성은 높아졌다. 본인부담금 한도액 제도 등으로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넘기면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의료기관이 대도시에 밀집되어 이곳에서 먼 지역 주민은 의료접근성이 다소 낮지만, 코로나19 대응에서 본 것처럼 한국은 의료접근성이 좋은 나라이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간병의 보험처리가 낮아 저소득층은 접근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개인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관이 비급여를 오남용하는 것을 규제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3) 교육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

한국은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취학률이 높다. 의무교육은 1948년 헌법과 교육법을 제정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헌법(제16조)에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1950년 6월부터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토록 했다. 6·25 전쟁 등으로 실행이 미뤄지다가 1954~1959년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에 따라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시작됐고 1959년에 완성되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에 도서·벽지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되었고, 1992~1994년에 읍·면지역 전학년, 2002년에 도시지역 신입생부터 3년에 걸쳐 2004년에 완성되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 고3 학생부터 시작해 2021학년도 전 학년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의 12년간 무상교육은 미국·영국 13년, 독일·호주 11~13년, 프랑스 10년, 핀란드·일본 9년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한국의 공교육은 어느 정도 평준화되었지만, 사교육에서 소득계층간 차별은 극심한 수준이다. 사교육에 대한 투자액으로 상위권 대학교 입학이 좌우된다는 통념이 만연되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 원이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초등학교 5학년 26만 원, 중학교 1학년 38만 원, 고등학교 3학년 63만 원)이었다.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월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는 월 12만 4000원, 월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는 월 64만 8000원으로 약 5배이었다.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8.3%이었다.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경쟁 심화, 교육열 상승, 사교육 시장

의 양극화 등이 꼽힌다. 사교육비 증가는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학원비 부담 완화, 사교육 시장 규제 강화, 공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신분제가 폐지된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이지만, 중상위계층은 자녀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공고히 한다. 특히, 의사와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을 가지려면 사교육에 대한 투자는 필수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교육은 평생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 정부는 국민의 역량강화와 사회통합을 위해 평생학습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도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면 모든 시민이 교육·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의 숲’을 조성할 수 있다. 지방대학교를 육성하여 대학생의 수도권 집중을 줄이고, 지역 산업과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졸업후 거주 비율을 높이면 지방소멸을 예방할 수도 있다.

정부는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공교육 투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헌법상 규정된 초등·중학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고등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성인 학습자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현행 대학생 국가장학금도 연령에 구분없이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을 수 있기에, 더 많은 성인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4) 공공주택으로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가 복합적으로 진행되었다. 도시로 사람과 돈이 모이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불평등은 심화된다. 부동산은 폭등하고 임금격차는 커지고 중산층은 무너져 가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리처드 플로리다는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도심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빈부격차’란 책에서 세계 55개 대도시 인구는 전체 인구의 7%에 불과하지만 세계 경제의 40%를 담당한다고 주장한다.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 도심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빈부격차 리처드 플로리다 (지은이), 안중희 (옮긴이) 매일경제신문사 2023-07-14

벌어지는 빈부격차, 폭등하는 부동산

뉴욕은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다. 타임스퀘어는 화려한 광고판으로 가득하고 소호 지역의 고급 상점과 레스토랑에는 사람들로 붐빈다. 그러나 이면에는 빈부격차나 부동산 폭등 같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2013년 기준, 맨해튼의 소득상위 5%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20% 가구보다 무려 88배나 많은 돈을 벌었다. 2015년 뉴욕의 부동산 가치는 약 2조 9,000억 달러인데, 이는 세계 5위 규모인 영국의 국내총생산과 같다. 뉴욕 소호의 아파트 한 채의 가치는 테네시주 앰피스의 주택 38채와 맞먹는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뉴욕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슈퍼스타급 도시는 같은 국가 내 다른 도시보다, 다

른 국가의 슈퍼스타 도시와 더 많은 공통점을 공유한다. 런던이나 홍콩, 파리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며, 세계 도시 순위 8위인 서울도 마찬가지다.

도시가 성장할수록 심화되는 문제들

대도시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55개 대도시 인구는 세계 인구의 7%에 불과하지만 세계 경제의 40%를 담당한다. 특히 텔레비전, 영화, 음악, 공연예술과 같은 창조산업 분야에 있어 도시의 지배력은 압도적이다. 런던 대도시권은 영국 인구의 12.7%에 불과하지만 영국 내 창조산업 직종의 40%를 담당한다. 문화 접근성은 고학력, 고소득자를 도시로 불러 모은다. 그리고 이들을 인재풀로 활용하는 기업들도 도시로 모이고, 각종 스타트업도 도시에서 생성된다. 도시 경제의 메커니즘은 반복되면서 강화된다. 문제는 자본과 사람이 도시로 모일수록 심각해지는 불평등이다. 성장하는 도시는 계층 분리로 고통받고, 쇠퇴하는 도시는 경기침체로 고통받는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18929520&start=slayer>

한국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약 11%를 차지하지만, 전체 인구의 약 48%가 살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구 집중 유발 시설, 대규모 개발 사업 등을 규제하지만, 의료기관의 약 51%, 금융의 약 6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인구 유입은 계속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전국 부동산 시가총액의 61%가 수도권에 있는데, 수도권에 주소지를 둔 개인과 기업 등이 전국에 소유한 부동산 시가총액은 더 많을 것이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가총액의 61%는 수도권이 점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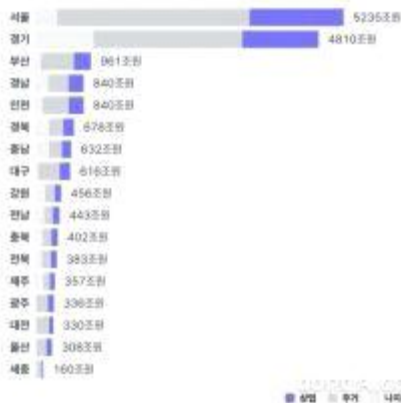
사람이 모이면 부동산 가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서울에서 살지 못하고 경기도나 인천으로 분산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전국에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켰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임직원의 상당수는 주중에는 지방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수도권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즉, 전국 부동산 시가총액 1경7788조원 부동산 평가서비스업체인 ‘공간의가치’는 2022년 상반기 기준 전국 모든 부동산 시가총액을 1경7788조원이라고 발표했다. 그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시가총액은 1경884조원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전체 부동산에서 주거용이 52%이고, 상업용(비주거)이 28%, 나지(건물이 없는 토지)가 20%였다.

시·도별 부동산 추정가는 서울 5235조원, 경기 4810조원, 부산 961조원, 경남 840조원, 인천 840조원의 순으로 높았다. 시·도별 시가총액을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1인당

시가총액은 서울 5.51억원, 제주 5.28억원, 세종 4.25억원의 순이고, 전국 평균은 3.45억원으로 계산됐다. 1인당 부동산 시가총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2.15억원이었다.

대한민국 시도별 모든 부동산 시가총액 (22년 3월말 기준)



포춘코리아(2022.08.17.)/ 이준섭 기자

<http://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39>

통계청이 2021년 11월 기준 주택 소유통계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가구주가 급여생활자인 서울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생활자 등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아동이 없는 가구보다 아동이 있는 가구가 주택을 소유한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봉급쟁이 가구 주택 소유율 48%...17개 지자체 중 꼴찌

송고시간 2023-06-29 12:00

아동가구 주택소유율 66%...비아동가구 54%와 큰 차이

비임금근로자 가구 69%...임금근로자보다 약 13%p 높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가구주가 급여생활자인 서울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생활자 등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아동이 없는 가구보다 아동이 있는 가구가 주택을 소유한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 소유 현황 분석(경제활동·아동가구 중심) 자료를 29일 발표했다. 이 통계는 2021년 11월 기준 주택 소유 통계와 일자리행정통계,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연계해 작성한 결과물이다.

이 시점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천206만3천 가구로 이 중 등록취업자 가구는 826만2천 가구였다. 이 중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는 633만7천 가구, 비임금근로자는 157만8천 가구로 나타났다.

등록취업자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비임금근로자 가구가 69.2%로 임금근로자 가구 56.3%보다 월등히 높았다. 자영업자가 포함되는 비임금근로자 가구가 급여생활자들 중심의 임금근로자 가구보다 주택 보유율이 높다는 의미인데, 비임금근로자 가구에 임대사업자가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차이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맞벌이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75.6%로 외벌이 가구 73.9%보다 다소 높았다.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울산이 66.9%, 경남이 63.8%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47.9%로 17개 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17개 지자체 중 임금근로자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서울이 유일했다. 서울에선 급여생활자가 내 집 마련을 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택을 소유한 전체 가구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아동가구(305만2천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5.3%였다. 다만 이들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66.1%로 아동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의 53.5%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아동 2명이 있는 가구의 주택소유율은 69.5%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아동이 없는 가구에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1인 가구가 포함된다는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아이가 있어서 주택을 구입할 의지가 더 크다는 해석, 애초에 여유가 있어서 아이를 낳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주택 소유 현황을 가구가 아닌 개인별로 보면 주택을 소유한 등록취업자 957만9천명 중 남성 소유자 비중은 60.6%, 여성은 39.4%였다. 등록취업자의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비임금근로자가 1.25호로, 임금근로자 1.06호보다 많았다.

speed@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9076300002?input=1179m>

따라서 정부는 저소득층도 적절한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다양한 사회계층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주거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준비할 때 목동신시가지를 개발하고 세입자 등 저소득층에게 영구임대아파트를 제공하였다. 이후 국민주택,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과, 희망타운 등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하였다.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한 단지에 조성하는 소셜믹싱을 시도하고 있다. 분양주택 입주자들이 임차인을 차별하고, 어린이놀이터 등 공유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도 있지만 임대주택단지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신축 주택단지에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늘리는 사업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24호점' 개소식 개최

송민수/ 기사승인 : 2023-08-03

[성남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성남시는 수정구 위례자연엔트리얼자이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1층에 '다함께 돌봄센터 24호점' 개소식을 3일 오후 2시에 열었다.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은 위례동 주민과 이용 아동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센터 개소 테이프 커팅과 시설 라운딩 등을 함께 했다. 연 면적 201㎡ 규모의 이곳 다함께돌봄센터는 부모의 이른 출근 때나 학교 수업이 끝난 뒤부터 부모 퇴근 때까지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시설이다. 어린이식당과 3개의 프로그램실, 교재실 등을 갖췄다.

개소식에 앞서 6월 19일 문을 열어 인근 초등학교 학생 36명(정원 40명)이 이용하고 있다. 생활 교육, 독서 지도, 놀이 활동과 기초외국어, 예체능, 과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돌봄 아동에게 밥과 간식도 챙겨준다. 현재 센터장을 비롯하여 보육교사 3명과 조리사 등 총 5명이 근무한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엔 오전 10시~오후 8시, 방학 중엔 오전 9시~오후 8시다. 학기 중 이용료는 월 5만 원(1식 포함), 방학 중 이용료는 월 10만 원(2식 포함)이다. 오전 8시~10시 사이 아침 틈새돌봄 서비스도 이뤄진다.

<https://thesegye.com/news/view/1065567501973178>

공공임대주택의 총량이 무주택자에 비교하여 지나치게 적기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총량을 늘리는데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는 민간이 재개발할 때 주택기금을 지원하여 10년 혹은 8년간 임대하는 민간임대사업도 장려하고 있는데, 무주택자는 공공임대주택을 더 선호하고 있다.

한편, 토지주택공사 등이 전국에 건립한 공공실버주택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커지고 있다. 공공실버주택은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을 한 곳에 둔 어르신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37형(전용면적 36.66㎡), 21형(전용면적 20.63㎡) 등이 있다. 해당 지역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자산보유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아직 공공실버주택의 총량이 부족하여 초기에 입주하지 못하면 대기기간이 길다는 것이 단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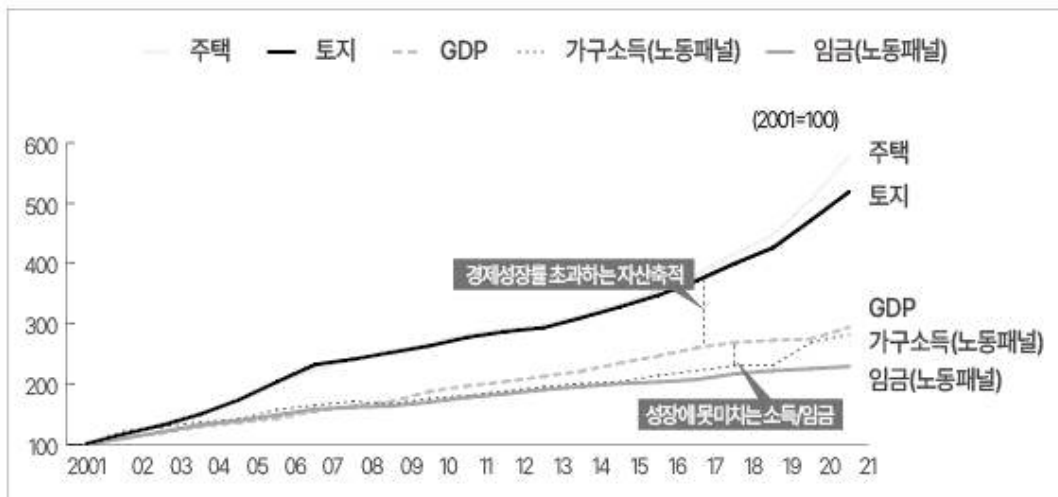
5) 자산형성의 기회를 늘릴 수 있다.

국가의 복지정책은 소득보장에 역점을 두고, 의료보장, 교육보장, 주거보장 등을 병행하였다.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비중은 점차 줄고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의 비율이 늘어나고, 고득총일수록 재산소득의 비율은 커지고 있다. 즉, 시간이 갈수록 ‘돈이 돈을 벌어’ 자산 격차가 더욱 커진다.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의 증가가 자본축적을 주도하기에 정부는 저소득층도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소득보다 빨리 증가하는 자본 축적, 원인은 토지가격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와 노동패널’에 따르면, 토지주택 가격배율이 반등하기 시작했던 2001년을 기준점(2001=100)으로 삼아 2021년까지 국민대차대조표의 주택시가총액과 토지가격, 노동자 평균임금, 가구평균소득지수 그래프, GDP와 함께 그려보면 <그림>와 같다. 그래프 상단에서는 토지와 주택가격이 줄곧 국민소득 증가분을 상회하는 반면 하단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이 2008년부터, 가구소득은 2009년부터 GDP 성장보다 하회한다. 전자는 경제성장을 초과하는 자본축적을, 후자는 성장에 못 미치는 소득과 임금 간의 간극을 의미한다.

국민소득대비 토지가격 배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와 노동패널

출처 : 매일노동뉴스(2023.8.3.)/ 박영삼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072>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이 장기 저리로 주택을 분양받거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자산형성의 한 방법이다. 금리가 낮을 때에는 장기 대출이 자산형성의 기회를 늘려주지만, 변동금리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을 갚느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기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6) 생활필수시설을 혁신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대도시로 인구가 밀집하면, 주거공간은 좁아지고 거주생활의 질은 나빠질 수 있기에 몇 개 광역 생활권으로 발전시키면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한국은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광주·전남·전북의 서남권, 대전·세종·충남·충북의 중부권, 대구·경북권, 강원권, 제주권을 발전시킬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는 고루 분포되어 있기에 시민생활에 밀접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대형병원, 복합쇼핑센터, 문화예술시설 등을 권역별로 발전시키면 정주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다.

지역 소멸을 막는 방법은 정주 인구가 외부로 덜 유출되고, 청년과 신혼부부와 같이 출산력을 갖춘 인구가 더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교육혁신 역량이 높은 지역이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일본 도쿄도의 도시마구는 2014년 지방소멸 지역으로 발표되었는데, 결혼한 가족들이 아이를 데리고 빠져나간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 이 지역은 아파트보다는 원룸이 많아 아이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급이 부족했다. 도시마구는 가족이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지역살리기 테마로 정하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구 유입을 꾀하고 활력있는 도시로 재탄생하였다.

7) 세금을 활용하여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려면 개인의 노력, 가족의 역할, 국가의 정책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복지국가는 “나라가 가난을 구제했다”는 증거이다. 복지국가는 의무교육을 실행하고 건강한 생활과 고용을 보장하여 국민의 삶을 보다 평등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이 경제활동에서 획득한 소득이나 저축, 상속을 통해 형성된 자산에 대해 누진적으로 과세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세계 여러나라는 코로나19 상황에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화폐를 남발하여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높아졌고, 자산에 의한 양극화는 커졌다.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늘리면, 즉,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을 늘리고 소비세를 잘 조정하면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세금을 복지와 교육 그리고 주거 등에 투자하면 시민의 삶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통해 복지와 교육 그리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예산을 크게 위축시켰다. 국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세제 개편으로 2023년부터 5년간 총 64조408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반도체 등 세액공제 혜택, 2023년 세법 개정안까지 반영하면 세수 감소 규모가 89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나 투자 세액공제 확대가 기업의 투자를 늘려 고용을 창출하고 중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런 낙수효과가 현실화 되기

어렵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중론이다.

한편, 건강보험, 의료급여, 초·중·고 무상교육 등 정부의 현물복지 혜택의 규모가 가구당 평균 847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같은 현물복지를 포함할 경우 우리 사회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은 15%에서 10%로 대폭 낮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와 같이 현금급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의료급여와 같은 현물급여를 모니터링하고 이것이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보, 무상교육 등 현물이전 포함하면 상대적 빈곤율 5%p '뚝'

황정환 기자 입력 2023.08.23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 8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그해 연평균 전국가구소득(6414만 원)의 13.2%를 차지하는 규모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정부가 제공하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건강보험 등 상품과 서비스 가치로 산출한 소득이다. 의료 부문이 전체의 49.8%, 교육 부문이 44.1%로 전체 사회적 현물이전의 93.9%를 차지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1064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현물이전 소득은 640만 원에 그쳤다. 가구 소득 대비해선 사회적 현물이전은 소득 1분위에선 48.3%, 5분위에선 7.1%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낮아졌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감안할 경우 분배 지표는 대폭 개선된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지니계수는 0.284로 반영 전과 비교해 0.049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수치가 낮을수록 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다.

전체 인구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율도 15.1%에서 10.1%로 5%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8232075i>

4. 지방정부도 정책으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1) 생활임금을 통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지급할 수 있다.

시·도와 시·군·구 등은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이나 용역 사업체의 직원에게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생활임금제도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북구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광역지자체 차원에서선 2015년 서울특별시가 처음 도입, 시행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2024년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157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낮다. 이는 2023년(1만766원)보다 391원 (3.6%) 오른 것으로 2024년 최저임금(9860원)보다 1297원 많다.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전국 평균(1만1162원)에도 못 미친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생활임금제가 실효성을 띠려면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 2023년 기준 광주는 시간당 1만1930원, 경기도는 1만1485원, 전북과 전남은 각각 1만1458원, 1만1455원으로 모두 서울시보다 높다. 생활임금은 시행 초기부터 2021년까지는 최저임금 대비 120%대 이상을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는 116~117% 수준으로 하락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05394.html>)

2)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할 때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저소득층이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사실상 공공의료기관이기에 이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많은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유행기 전담병상을 운영하며 최전선에서 싸우는 동안 의료진이 이탈하고 일반 환자들의 발길이 뜸해져 병상 가동률이 낮아져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35개 지방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2023년 6월 기준 46.4%로 2019년 80.5%(2020년 개원 성남시의료원 제외)보다 42.4%나 감소했다. 병상가동률은 부산광역시의료원 36.5%, 속초의료원 28.6%, 군산의료원 32.2% 등 대부분 50%를 넘지 못했다. 하루 평균 외래환자 수도 크게 줄어 2019년 789.2명에서 2023년 6월 613.5명으로 22.3%나 감소했다.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경영 실적도 악화했다.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한 곳은 2019년에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18곳이었지만, 2023년 상반기에는 남원의료원을 제외한 34곳이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지방의료원의 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위기상황에서는 국민영웅이라고 칭송하면서, 막상 환자의 이탈로 경영이 악화되었는데 정부는 2024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을 대폭 줄였다.

"공공의료 3차 병원 지향, 별도 수가·시스템 필요"

이재협 보라매병원장 2023.08.29.

사실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에서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의 활약은 눈부셨다. 초반부터 미증유의 감염병 대응 모델을 제시했고, 독자적이고 선제적인 시스템을 가동했다.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감염 차단 검사시설인 ‘글러브 월’ 등이 바로 보라매병원에서 시작됐다. 그런 보라매병원이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발간했다. 결코 생색을 내고자 함이 아닌 다시금 찾아올 감염병 사태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이번 백신에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보라매병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상세히 기술돼 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1주일 만에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장이 찾은 곳은 서울대병원도 국립중앙의료원도 아닌 보라매병원이었다.

메르스 사태 경험을 기반으로 구축해 놓은 감염병 대응 제반 시스템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보라매병원 시스템은 전국 대부분의 의료기관에 모범답안처럼 투영됐다. 하지만 고충도 적잖았다. 공공병원으로서 술선행해야 하는 상황에 동요하는 의료진을 설득해야 했고, 시시각각 변하는 방역지침에도 순응해야 했다.

당시 보라매병원 코로나 대응 책임자였던 이재협 병원장은 여러 기억 중에서도 보건당국이 전체 병상을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확진자 폭증으로 병상대란이 현실화 되자 보건당국은 공공병원인 보라매병원의 전체 병상을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전환할 것을 수 차례 주문했다.

하지만 이재협 병원장은 끝까지 이를 고사했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의료 취약계층의 중증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3차 공공병원 역할을 지켜내야 한다는 소신의 발로였다. 그는 “만약 모든 병상을 코로나 환자 수용을 목적으로 전환한다면 결국 취약계층 중증환자는 서울 시내에서 치료받을 곳이 없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술회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에도 3차 병원 역할이 필요함을 절감했다”며 “사회적 공감대와 함께 제도권의 전향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01576

3) 민관협력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위기가구는 129번에 전화하거나 시·군·구에 긴급복지를 요청하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등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으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경기도와 서울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때 위기가구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와 위기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맞춤형 민관협력을 실시하였다. 즉, 경기도는 종교계와 협력하여 홍보물 게시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제보 교육을 실시하고, 경기도약사회와 협조하여 도내 약국에 홍보물 스티커 제작·배포하며,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물 배포, 소상공인 연합회와 누리집 배너와 회원 대상 전단지 및 카카오톡 홍보, 경기도교육청의 누리집 공지사항 등록과 학부모에게 앱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조사 때 발굴·제보를 하고,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경기북부와 협력하여 전기 검침 시 발굴·제보, 사회복지 기관·단체와 사회복지업무 수행 중 발굴·제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통해 “1년간 3182건의 제보를 받았고, 그중 2412명의 도민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4) 위기정보 빅데이터 등으로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시는 기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을 복지와 건강 분야 중심으로 개편하며 명칭도 ‘동행센터’로 변경했다. 2015년 시작된 찾동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찾아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이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위기가구 중심의 선별 발굴과 신속 지원에 동주민센터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사업을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위기정보 빅데이터(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정보)로 확보한 정보와 구·동별 여건을 고려한 자체 지표 등을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집중 조사·관리한다. 긴급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는 지원을 먼저 하고, 사후 검증을 한다. 긴급 복지가 필요한 가구를 위한 ‘돌봄SOS 서비스’ 지원 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85%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통·반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이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사회복지관·고립가구지원센터와 협력해 지원 거부 가구 등을 관리한다. 아울러 동주민센터 통합복지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업무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 복지 담당 전 직원을 상담전문관으로 지정해 교육한다. 종합적인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매뉴얼도 제작한다. 건강 관리는 저소득 독거노인, 빈곤·돌봄위기 가구 중심으로 강화한다.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가 건강 취약계층을 방문해 건강 상담·평가를 하고, 보건소와 연계해 지속적인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5) 통합돌봄을 통해 시민을 보다 촘촘히 돌볼 수 있다.

통합돌봄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광주광역시도 2023년 4월 1일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제도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되 부족한 틈새는 ‘광주+돌봄(가사·식사·동행·건강·안전·주거편의·일시보호 등 7대 분야)’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돌봄콜’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이 돌봄콜에 접수하여 구청이 상담 내용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동행정복지센터에 알림메시지가 뜬다. 또한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이 가정방문 후 상담한 내역도 별도로 개발된 앱과 모바일 기기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처리된다. 민간서비스 제공자도 현장에서 서비스 결과를 처리할 수 있게 돼 실시간 서비스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돌봄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행정과 민간의 긴급대응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서비스 이용자가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광주권역이면 그동안 지원 내역을 전산 상으로 이송, 전입한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이어받을 수 있다. 1인당 지원한도액도 연계 관리해 서비스 단절과 중복을 예방한다. 이 밖에 종이 서류 없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업무 처리로 탄소 배출량 감소, 업무처리 능력 확대 등을 노릴 수 있다. 광주시는 시행 4개월 만에 5748건의 돌봄 요청이 접수됐으며, 선제적 의무방문까지 1만4874건의 현장방문 활동을 펼쳐 5188명의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6)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다.

전남 화순군이 민간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유사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해 안정적인 사회 첫 출발을 지원하고 인구유입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아보려는 아이디어다.

화순군은 청년 인구 유입과 주거 안정을 위해 군이 보증금(4천800만 원)과 예치금(88만 원)을 지원하고, 입주자는 월 1만 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만 내면 거주할 수 있다. 부영주택과 협약을 맺고 노후한 임대아파트 내부를 수리해 올해부터 4년간 총 400가구를 공급한다. 당첨자들은 방 2개와 화장실, 거실, 주방, 베란다를 갖춘 20평형(전용면적 49.9㎡) 아파트에서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여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만 18~49세 이하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올해 1차 신청에서 50가구 모집에 506명이 몰렸다.

전남 나주시도 부영주택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30가구를 공급한다. 나주시역 사업장에 일자리를 얻고 전입하는 18~45세 청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대보증금은 나주시가 전액 지원하며 임차인은 매월 관리비만 부담하면 되는 이른바 '0원 주택'이다. 시는

2025년까지 100호 공급을 목표로 연차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7) 1인가구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다.

전체 가구중 1인가구가 60%가 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지난 8월에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쌍글빙글 사랑방’을 개소하였다. 구는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에 ‘쌍글빙글 사랑방’을 조성, 1인 가구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곳에 커피 머신을 비롯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마련해 1인 가구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교류하거나 대화,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무인카페를 운영한다. 1인 가구들의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물물교환 플랫폼인 ‘스토리마켓’을 운영, 중고물품이나 잉여제품을 나눠쓰는 공유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 매월 1회 아나바다 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8월에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취약 중장년 1인가구들을 대상으로 소모임 활동을 운영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 광주시는 여성 1인가구에게 범죄예방 물품 6종(스마트초인종, 홈카메라, 문열림센서, 문열림방지장치, 송장지우개, 휴대용경보기)을 제공했다.

8) 고립·은둔을 줄이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중 고립·은둔 청년 비율이 2021년 기준 5.0%이었다. 이를 2021년 청년인구(1077.6만 명)에 적용하면 고립 청년 수는 53.8만 명에 달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에는 3.1%, 약 33.4만 명이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추정 인구가 20.4만 명가량 늘었다. 오랜 거리두기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된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동거하는 가족 및 업무상 접촉 이외 타인과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 체계가 없는 경우’를 고립 상태로 보고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수치를 도출했다.

청년이 고시원이나 원룸과 같은 질 낮은 공간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넓은 집에서 사는 노인가구와 동거를 시도해봄직하다. 많은 나라에서 화장실과 개인 방만 따로 쓰고 거실, 주방, 세탁실 등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코리빙하우스’가 뜨고 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사는 노인이 여유 방을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청년으로부터 장보기와 같은 일상생활 도움을 받는 공유주거운동을 시도해봄직하다.

데일리팝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일본에서는 독거노인과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세대통합형 주거공유사업인 ‘いりだけ支援(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호평을 받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크게 주거와 생활비를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다세대와 교류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특별히 젊은 층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젊은 층의 목소리만으로 활기를 느끼며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학생이 강사가 되어 서예교실이나 영어회화 교실, 체조교실을 열어 다세대간 교류를 통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다마대학(多摩大学)은 동경도 다마시(多摩市)·하치오지시(八王子市)에 위치한 다마 뉴타운(多摩ニュータウン)에 공용 거실을 포함해 가구, 가전제품이 모두 배치되어 있는 룸 셰어 형식의 학생 숙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는 이 학생 숙소의 집세는 약 3만 5000엔으로 일반 기숙사나 원룸보다 저렴하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며 세대 공감을 나눌 수 있다.

현재 일본 전국 각지에서는 젊은 층과 노년층 등 다세대가 서로 도움을 주고 협력해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한창이다. 초고령사회는 공적복지나 공적도움만으로 모두를 지원할 수 없는 만큼 다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협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24393>

9)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즐거운 삶을 추구한다.

부산 영도경찰서 권종호 경위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라는 책을 냈다. 그는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을 찾는 형사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3多(술병, 외로움, 빈곤)이고, 없는 것이 3無(가족[보호자, 친구], 돈, 희망)라고 증언한다. 그는 “고독사는 복지사회의 그림자”라고 덧붙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는데, 약간의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은 고독사한다고 주장한다. 고독사는 고독한 삶의 증거이기에 이를 줄이는 사회적 노력을 해야 한다.

최근 대구광역시는 ‘연결로 즐거운 생, 고독사 없는 대구’를 비전으로 잡았으며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위험도 조사에 나선다. 사회적 고립해소를 위한 연결강화,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기반구축 등을 4대 목표로 잡았다. 34개 세부사업을 구·군 및 관계 부서와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2023년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는 50~60세 장년의 11만7000여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다. 경제·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청년의 3000여 1인 가구도 이번 조사에 포

함됐다. 조사를 통해 위기군을 발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역사회 고립해소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상점인 ‘마을수호점’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활용, 고독사 위험군을 상시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즐생단(즐거운생활지원단)’도 양성한다.

고독사가 이제 더 이상 노년에 한정되지 않고 청년, 중·장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어 안부확인사업도 대상자별 특성과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다변화할 계획이다. 일상생활을 즐겁게 지원,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24시간 AI 돌보미 사업’과 전문상담원들의 대화를 통해 은둔형·자살위기 청년들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생명의 전화 핫라인 안부확인사업’도 도입된다. 발굴되는 고독사 위험군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민간 통합 사례관리자를 추가 배치하고 지역 내 복지관·가족센터·학교·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민·관·학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566> 표)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23년 2월 기준 연명치료 중단 의향서를 제출한 사람이 164만 4507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의 13.1%이다.

원하는 사람에게 ‘사전장례의향서’도 작성하도록 안내할 것을 제안한다. 공익기관이나 단체에 장례비를 선납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내 장례를 이렇게 치러달라’는 뜻을 담은, 작성자가 자신의 장례식 형태에 대해 유족에게 남기는 일종의 유언장이다. 부고(訃告) 범위, 장례 형식, 매장과 화장 여부를 비롯해 수의와 관의 종류까지 장례에 관한 모든 의식과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담고 있다. 형식적이면서도 고비용 구조인 장례 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기에 ‘작은 장례식’을 치르자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54XX34200015>)

인천광역시 중구가 ‘고독사 유품 정리 지원사업’ 2023년부터 추진하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 사업은 가족·친척 등 주변인과 단절된 채 자살·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는 주민의 유품 정리를 지원,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이웃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이 사업은 혈흔·냄새 제거 및 소독 등을 포함한 특수청소, 유품 정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무연고자 또는 연고가 있더라도 가족이 연락이 끊긴 지역 내 저소득층이며, 특수청소 업체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한다.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70960>)

아울러, 집에서 죽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병원 이외의 곳에서 사망하면 경찰이 ‘수사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유족에게 불편한 제도이다. 노환, 질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치료 기록을 참고하여 간단하게 확인하고 유족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5. 불평등 시대에 ‘슬기로운 시민생활’의 시도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막고 모든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 시민도 불평등 시대에 ‘슬기로운 시민생활 수칙’을 실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운동을 장려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여 보자.

- 모든 시민에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법령상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1년에 1회 이상 교육받도록 한다.
- 14세 이상 모든 시민이 ‘보조금24’에 가입하도록 한다. 본인이나 가족이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기에 스마트폰 등으로 신청하면 알림문자를 받을 수 있다.
- 18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1인당 10만원 정도면 국민연금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20세 이상 모든 시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2년에 1회 이상 국가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고, 국가암검진도 무상 혹은 10% 본인부담금만으로 받을 수 있다.
- 아동, 노인, 등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매년 ‘사회보장수첩’을 제공한다. 복지급여 정보를 전자북과 종이책으로 발간하여 무상으로 보급한다.
-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지식정보사회를 대비하게 한다. 다수 국민이 신청하면 5년 동안 300만원 범위에서 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 정부의 복지급여(현금과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일원화시킨다. 국민이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급여를 1인당 한 개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한다.
-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지혜의 숲’을 조성하여 운영한다. 주민 접근성이 좋은 학교의 유휴공간에 교육·문화·복지를 위한 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이 도서·음반·미술품 등을 기증하고, 온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더불어 사는 주거공유운동을 사회운동으로 펼친다. 청년과 노인을 위한 주거공유운동을 시작하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운동을 펼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사전장례의향서를 쓰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례를 간소하게 치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참고문헌

- 강은진, 워킹푸어 가족의 가난 탈출기, 작아진둥지, 2022.
- 권종호,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현직 경찰관의 눈으로 바라본 고독사 현장, 산지니, 2023.
- 김용익, 이창곤, 김태일, 복지의 문법, 한겨레출판, 2022.
- 리처드 플로리다 저, 안종희 역,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도심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빈부격차, 매일경제신문사, 2023.
- 이용교, 디지털 사회보장론, 학지사, 2020.
- 이용교, 알아야 챙기는 건강보험상식, 인간과복지, 2021.
- 이용교, 알아야 챙기는 주거복지상식, 인간과복지, 2021.
- 이용교, 나와 가족을 위한 복지상식, 드림미디어, 2023.
-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자료실) <https://cafe.daum.net/ewelfare>